

관심집중 14일 한미정상회담

핵심의제는 '북핵'

“정말 이번 회담을 잘 봐야 한다. 지혜 찾기가 관건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이를 앞으로 다가온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북핵사태는 물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굵직한 굵직한 현안을 둘러싸고 실타래처럼 얽히고 얽힌 양국 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번복점을 찍고 '차이보다는 공감대'를 찾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회담의 나래를 펼 수 없도록 만드는 난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핵심 의제와 논의 방향=이번 회담에서는 주요 이슈들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이 중요 관심사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대책과 6자회담 재가동 해법도 반드시 걸려야 할 의제로 꼽히고 있다.

외신들 “어렵고 힘든 협상”...美 강경입장 확고 FTA·작통권 ‘순조’ 미사일·6자회담은 ‘난항’

먼저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북핵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립감이 더해졌다. 9.19 공동성명 채택 1년이 다되도록 지난해 11월 이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을 어떻게 재개시키느냐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제제가 효과적이라면 퇴로를 열어주고 핵 포기 시 얻을 혜택을 북한이 이해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굳게 닫혀있어 보이는 부시 대통령의 마

음이 열릴 지는 미지수다. 서울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9.19 성명 이행을 원치 않는 게 문제”라면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방침을 분명히 한데서 보듯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양보’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과 연관된 주제는 역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국내 보수세력의 주요 인사들이 끝까지 연일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듯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다.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전시 작통권을 환수 받게 되더라도 시기를 둘러싸고 복잡한 수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당국자는 “2009년이나, 2012년이나”하는 환수시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양국 동맹의 미래와 연관된 주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순조로운 협상 진행을 위한 정상 차원의 결의나 지지 의지를 서로 나눌 수 있을 것”(송 실장)으로 전망된다.

◇관심살리는 정상 ‘언론회동’=이번 회담은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 대신 정상회담 직후 ‘언론회동’ 형식을 통해 회담의 합의사항이나 양 정상의 공통된 인식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회동은 기초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공식 질문을 받아 답변을 하는 ‘기자회견’(press conference)과는 달리 양 정상 기자들을 만나 회담 결과를 전달하는 형식이다. 현장에서 ‘정상들의 판단’에 따라 질의 응답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 정상간 입장차가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호소자들의 ‘해몽’이 분분하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행복마을’ 행복할까요



홍행기
사회2부 차장

전남도가 추진 중인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이디어를 제시한 박준영 지사를 비롯 도청 내 실무 담당자들은 ‘농촌의 장기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실현성이 높지 않다’며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분위기다. 무엇이 문제일까.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빈집이 많은 곳에 사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한 데 모아’,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공동체에 거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박 지사의 청사진에 따르면 교육과 문화, 복지기능이 잘 갖춰진 이 행복마을에는 1천여 명이 거주하며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게 될 전망이다.

박 지사도 언론과의 간담회나 시장·군수회의 등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도시로 떠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와 필요성을 역설하며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원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특정지역에 모아야 한다’는 행복마을의 전제조건이 충족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과연 농촌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좇아 평생 살아야 할 고향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는 둘째 치더라도, 집은 물론 논과 밭, 과수원 등 경제적 기반이 있는 기존 주거지를 떠나 낯선 행복마을로 자진해서 이주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남도가 최근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전남부서인 ‘행복마을 과(課)’까지 만들어 사업을 맡아보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도정 수장인 박 지사의 특명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욕은 거창하지만 실제로 전남도는 아직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 그 흔한 타당성 조사나 연구용역 한 번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 이주를 해야 할 농촌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공청회 같은 것도 없었다.

농촌 마을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뿌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기존 마을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옮기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행복마을’을 추진해야 할 만큼 전남 농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더 진지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dplane@kwangju.co.kr



(사)국학원 등 4개 단체가 12일 오전 광주시 동구 대인동 중국문화원 앞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팸플릿을 든 채 집회를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중 동북공정’ 공동 저지

정부·시민단체 범국민연대 결성...1천만 서명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와 민족진영 총연합 등 30여개 민족·역사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실에서 ‘동북공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칭)’를 결성하고 향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성명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 역사의 자취를 빼앗는 것은 물론 동북아시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선열들이 피로 지켜온 거룩한 역사를 어떠한 희생도 치르더라도 일지단결해 지켜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한강 이북이 자신들의 국가였다”는 중국의 주장을 북한을 지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한반도를 영원히 분단시키려는 책략”이라며 “동북공정은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화 패

권주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역사와 혼을 빼앗긴 민족은 그것을 빼앗은 나라의 영원한 노예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의 동북공정 사태는 역사에 무지하고 무계념으로 일관해 온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범국민연대는 남북한 화해와 정부가 동북공정 논리에 학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자주적인 민족통사를 재정립해야 하며 동북아재단 운영에도 민족사관에 충실한 단체를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북공정에 항의하는 1천만 서명운동을 인터넷에서 전개하고 범국민 결의대회와 학술대회 개최,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靑, 경호실 간부 명품수수·車대금대납 조사

청와대는 12일 대통령 경호실 간부가 한 사업가로부터 선물을 받고 자동차 구입 대금까지 일부 대납시킨 혐의를 잡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의 부이사관급 간부인 김모씨는 작년 11월부터 사업가 옥모(여)씨로부터 명품의류 등을 받고, 자동차 구입대금 일부를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다가 문제가 되자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작년 5월 자동차 판매 영업지점장인 황모씨로부터 소개받은 옥씨가 인도에서 한류축제 행사를 기획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주(駐)인도 대사에게 e-메일을 보내 옥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옥씨로부터 외제 고급 양복과 노트북, 휴대전화, 고급 만년필 등 약 1천만원 어치의 선물을 받았으며, 작년 8월에는 새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의 일부

인 800만원을 옥씨에게 대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옥씨가 인도에서 추진했던 한류행사가 협찬업체 확보 실패 등으로 좌절되자 선물을 되돌려주고 차량대금도 갚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옥씨는 김씨에게 부탁한 일이 성사안되자 불만을 제기했고, 그래서 되돌려 준 것 같다”며 “어쨌든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류행사 무산으로 불만을 가진 옥씨가 김씨를 자신에게 소개해준 황씨를 상대로 청와대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명숙 총리 “감정보단 논리적 대응을”

한명숙 총리는 12일 중국의 한국대사대공 시도로 알려진 ‘동북공정’ 문제와 관련, “감정적이기 보다는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의 고대사 왜곡문제가 또다시 불거진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04년 중국측과 맺은 구두양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해결할 부분과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을 구분해서 상호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이펙트 LCD TV 광고 사업기, 대리점 모집 TELSON MEDIA (주) 텔슨미디어

35년 전통의 최고급 안락침의 연구 개발한 **장생·독송 모가리 식품**

TEL: 062-385-3303, 382-4000, 382-4304

장생·독송 모가리 식품

35년 전통의 최고급 안락침의 연구 개발한

TEL: 062-385-3303, 382-4000, 382-4304

실내정원 인테리어

○싱크, 수세, 리모델링
○실내 사무실, 인테리어
○방수, 조경, 인테리어 제품, 실내인테리어, 분수, 문패 받아 드오세

TEL: 062-511-8280

마루의 숲, 그린 투어

TEL: 062-226-5544, FAX: 062-226-5542